

##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sup>1)</sup>: 핵심 추진 과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Youth Protection Policy: Focusing on Policy  
Agenda "Community Youth Support Net Project"

김지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의 지난 1년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전략 중 하나인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에 따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 전략은 공적 책임하에 위기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의 성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명칭을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하면서 시·군·구 내에 전담조직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는 선도사업을 운영(2019~)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2020~2022)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임에도 15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되어 지자체의 책무 이행 정도가 아쉽다. 한편,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적정 인력 배치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별 부처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며 그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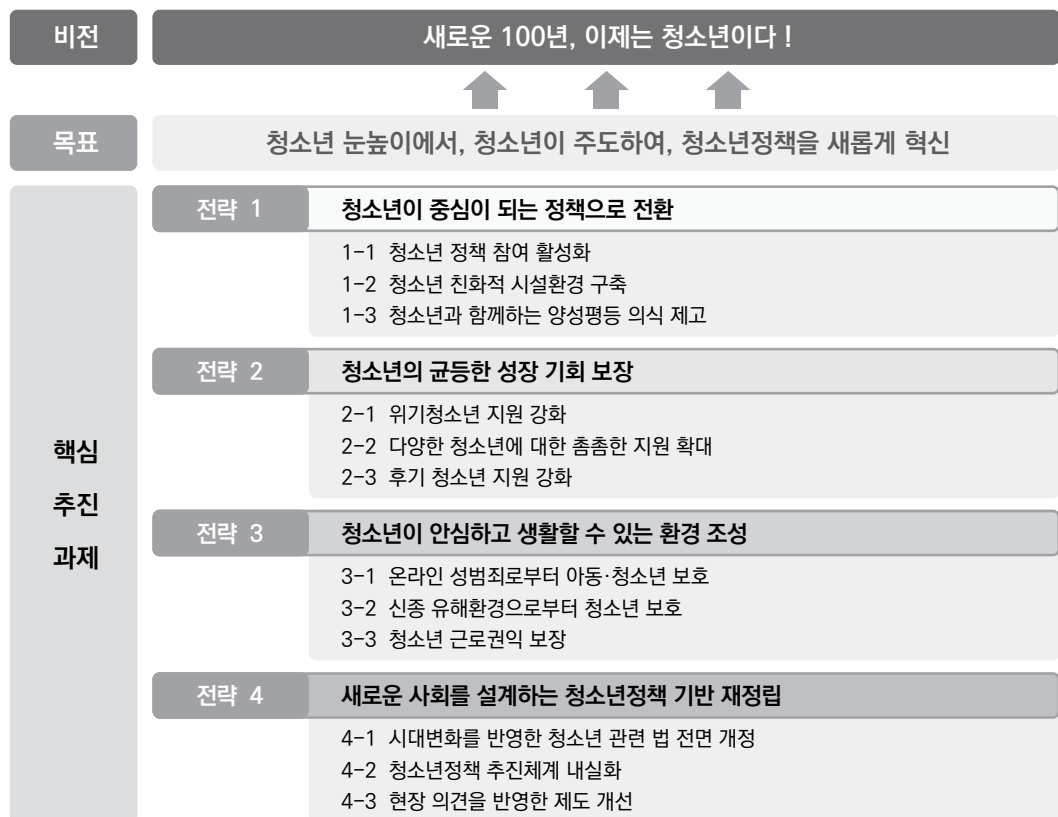
1) 이 글은 여성가족부의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1a),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자료집(여성가족부, 2021b) 등을 근거로 추진 현황을 기술하였고, 진단 및 향후 과제는 필자의 사견임을 밝혀 둔다.

## 1. 들어가며

지난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하에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혁신”이라는 목표와 4대 추진 전략

에 따른 12개 핵심 추진 과제를 포함한다(그림 1). 이 글에서는 ‘이달의 초점: 아동·청소년 보호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에 맞춰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4대 추진 전략 가운데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에 국한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시·군·구 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담조직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였다.

그림 1.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전략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2020. 5. 11.).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 p. 13.

한편, 같은 시기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도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과 정책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의 최일선인 시·군·구 단위의 위기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 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추진 현황과 진단

### 가. 추진 배경과 경과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라는 다기관 협력망의 명칭을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하고 시·군·구 내에 전담조직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청소년의 발굴부터 지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사업은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9월부터 4개월간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 9개 지역, 2021년 1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sup>2)</sup> 2021년 사업 예산은 총 15억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로 지역별 사업

비는 1억 원 규모이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별도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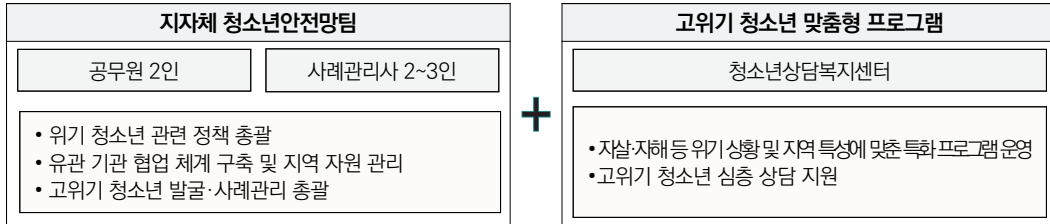
선도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모형 발굴 및 개발, 전국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 도출, 고위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고위기로 판정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여성가족부, 2021a, pp. 3-4). 즉, 선도사업은 전국 확산을 위한 지역의 모델 개발, '고위기로 판정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 대상의 범위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또한 지자체는 위기 청소년 보호라는 공적 사무를 이행할 주체임에도 시범 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를 오히려 희석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는 기치와도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 나. 사업 추진 체계

사업의 핵심은 그간 민간이 주로 담당하던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 사무를 시·군·구 내 전담조직이 주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한 데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안전망팀과 지방사무로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다. 청소년안전망팀은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과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된다.

2) 2021년 현재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시범 운영 참여 지역은 서울 강서·노원·송파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북구, 경기도 구리·군포·수원·파주·화성시,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경남 김해시, 미정(추가) 등 15개 지역이다.

그림 2.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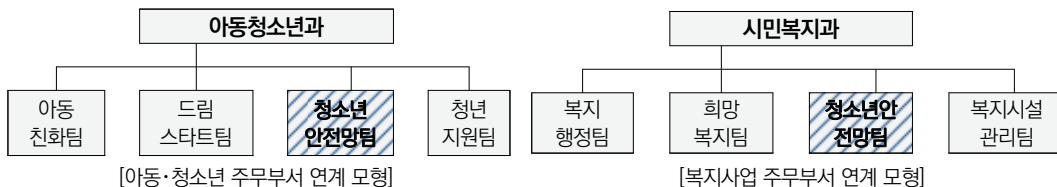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21a). p.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1a, p. 6).

이와 같이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자가 한 팀을 이루는 방식은 학대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와 보호대상아동의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팀의 인력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즉, 현재 시범 사업 구조만 보면 같은 시·군·구 조직 내에 인력 구조가 동일한 아동, 청소년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결국 18세 미만 위기 아동·청소년은 두 개 전담조직 모두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다소 비효율적인 추진 체계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확산과 안착이 쉽지 않을 듯하다.

선도사업에서 청소년안전망팀은 위기 청소년 사무의 컨트롤타워로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의 지원 기구를 직접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경찰·보호관찰소,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고위기 청소년을 사례관리 해야 한다. 따라서 시범 사업 지침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이미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내 관련 부서에 위기 청소년 지원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사를 추가 배치(상주)하는 형태로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그림 3). 이에 현재 14개 시범사업 지역의 해당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아동청소년과, 아동돌봄청

그림 3. 청소년안전망팀 설치 권고(안)



자료: 여성가족부. (2021a).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p. 11.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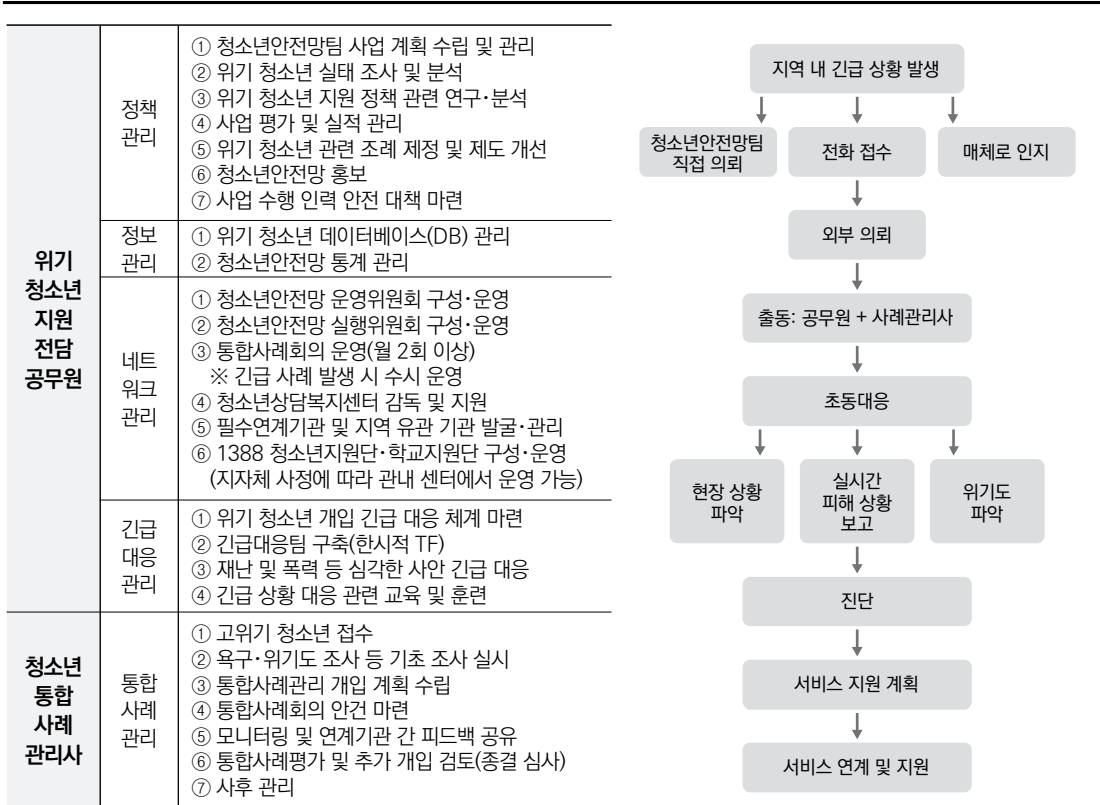
소년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과,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청소년청년정책과 청소년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교육청소년과, 노인아동과 청소년안전팀,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등 매우 다양하다. 즉, 청소년안전망 지원 기구를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의 배치 등을 결정하는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와 상이한 조직에서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이는 18세 미만 고위기 아동·청소년의 경우 동일 시·군·구 내 2개 위원회에서 제각각 심의·

판정해야 하므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다.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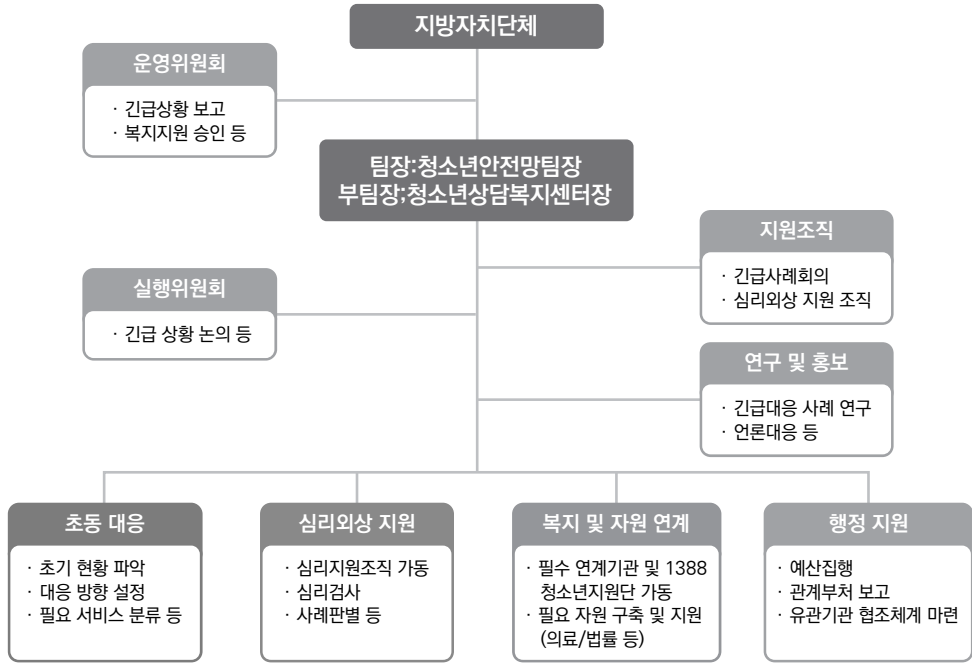
사업 내용은 청소년안전망팀 전담인력의 역할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담공무원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위원회 등의 지원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재난·폭력 등 청소년 위기 사안에 대한 대응을 총괄해야 한다(표 1). 주목할 부분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폭력이나 자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림 4. 청소년안전망팀 업무분장 및 긴급 상황 대응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2021a).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p. 17, p. 19. 그림 참조.

그림 5. 긴급 대응 체계 조직도(예시)



자료: 여성가족부. (2021b), p. 38. 그림 참조.

표 1. 청소년안전망 지원 기구 구성 및 운영

구분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통합사례회의	솔루션회의
주관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지자체 (안전망팀 소관 과장)	지자체 (안전망팀 소관 팀장)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운영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긴급 상황 시 수시 운영)	월 2회 이상 (긴급 상황 시 수시 운영)	월 2회 이상 (긴급 상황 시 수시 운영)
역할	· 통합지원체계 실태 점검 및 활성화 · 위기 청소년 관련 제도, 조례·규칙 제언 · 특별 지원 청소년 선정 · 위기 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 실비 지급	·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 조사·발굴 · 위기 청소년 사례 발굴·평가 및 판정 · 위기 청소년 특성별 연계방안 모색 · 서비스 연계 결과 공유 및 실적 보고	· 위기 청소년 발굴 · 위기 수준 판정,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 통합서비스 모니터링 · 종결 심사 및 사후 관리 계획 논의	·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획 · 사례관리 방법 등 논의

자료: 여성가족부. (2021a), p. 16. 그림 참조.

청소년안전망팀이 출동한다는 점이다(그림 4, 그림 5). 이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의 학대 피해 사건은 청소년안전망팀이 출동하는 위기 사안일까? 만약 그렇다면 아동보호팀과 역할이 동일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 내 긴급 상황'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범위가 모호하다.

한편, 그간 위기 청소년 정보시스템은 사업별, 기관별로 제각각 구축·운영되어 왔다. 이를 연계 ▶통합▶고도화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2021~2023)'이 추진 중이며 연내 일부 개통을 앞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b).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행정망을 기반으로 하므로 위기 청소년의 정보 처리와 유관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연계를 위해서도 전담공무원 배치가 필수적이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제2항(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신설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고(2021. 3. 23.),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TF' 조직도 신설되었다.

### 3. 지역사회 중심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 구축

지금까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추진 전략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기 청소년 관련 사무를 지자체가 담

당하고, 공공이 민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기조와 선도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 전담인력, 추진 기반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살피보았다.

#### 가. 지원 대상의 분절성 극복:

##### 아동·청소년의 다차원적 위기 대응

선도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위기로 판정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연령 면에서 보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청년까지 포함하여 생애 전반기 정책 대상을 상당부분 포괄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고위기' 여부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 확대', '위기 청소년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이라는 기조가 무색할 정도로 대상 범위(coverage)가 제한적이다.

아동·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위기와 우발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적인 위기 모두 고위기로 진전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에서 이 시기의 특성 자체가 다양한 환경체계 속에서 심리·정서·행동과 관련된 각종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가족해체나 폭력과 학대, 범죄의 가해·피해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즉, 위기 정도를 기준으로 고위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류정희, 김지연, 2019).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고위기 청소년의 정의도 제각각이라 '위기 청소년 안전망'이 '고위기 청소년 안전망'으로 더욱 협소해진 듯하다.

특히 원가정에서 이탈하여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별도의 위기 판정 절차가 없더라도 고위기 청소년임이 자명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은 감소세인 반면 초등학교만 증가세를 보이는 등 청소년쉼터 입소자 상당수가 18세 미만 아동이며, 쉼터 입소 전 청소년의 노숙 기간이 평균 35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외, 2020a; 김지연 외, 2020b). 이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분절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발굴' 못지않게 안전망에 포착된 이들이 '탈위기'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위기 청소년 대부분 가정 내 복합적인 위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원이나 서비스로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안전망팀이 고위기 청소년을 선별하여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위기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 안전망에 쉽게 포착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다른 조직 또는 민간기관과 협업하는 지역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선도사업의 성과는 고위기 청소년 몇 명을 지원했는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사업이 무엇인지의 여부가 아닌, 지자체 책임하에 안전망에 포착된 위기 아동·청

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제도적 협업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전담인력: 시·군·구 위기 아동·청소년 전담인력 통합 배치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의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위기 청소년 사무는 본래 법률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선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담인력 배치 지역을 '지난해' 확대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둘째, 청소년안전망팀의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팀 전담공무원의 직무와 자격 기준이 달라야 하는가?

먼저 첫째 의문은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을 반증한다. 즉, 시범 사업이 올해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상 지역이 15개에 불과하고 1개는 여전히 미정이다. 지자체의 책무 이행 수준도 아쉽지만 정책 기조 전환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그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책무를 이행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시·군·구의 상황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학대 사무의 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즉시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는 청소년전담공무원과 비교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감당해야 하는 보호대상아



등의 범위도 명확하다. 이에 배치뿐 아니라 적정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시·군·구에 청소년안전망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인구가 극소한 지역은 '팀' 신설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도사업 과정에서 아동보호팀 내에 위기 청소년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담인력 간의 직무 협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문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직면하는 위기의 한 유형이다. 청소년전담공무원도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장 조사에 필요한 실무 역량이 필요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학대 피해 아동이 보일 수 있는 고위기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군·구 단위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의 직무와 자격 기준을 구분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시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주제를 정해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은 한시적이며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위기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들 전담공무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등의 사안을 개별 부처가 제각각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 다. 추진 기반: 위기 청소년 통합정보 시스템(행정망) 구축·운영

그간의 위기 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은 대상과 서비스의 '연결 실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새로운 정보시스템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의 데이터를 단순히 통합하고 업무 표준을 마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사례관리 업무 지원 등 유관 기관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고도화가 요구된다. 결국 위기 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이 행정망으로서 본격 가동되는 2024년부터는 시·군·구에 전담공무원이 배치(지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위기 아동·청소년 사무의 분절성을 일부 극복하고 지역 단위 아동·청소년 전담인력과 서비스도 부분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청소년안전망에 포착된 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 피해 아동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정보망을 기반으로 유관 기관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위기 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된 우려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정보보안체계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행정통계 생산에서 탈피하여 위기 청소년 사례(case)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 내 기관이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효과적으로 연대하는 안전하고 효

과적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핵심 추진 과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시범 사업을 통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닐 것이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각 경계를 넘나드는 위기 아동·청소년이 지자체 보호체계 내에서 차별 없이 지원을 받고 탈위기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협업 구조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에서 강조한 공공성 강화는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보호체계 구축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은 지원 대상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0~24세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정책 대상의 규모를 고려한 적정 전담인력 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혁신과 전향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다. ■

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류정희, 김지연. (2019).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 2019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자료집. 세종: 교육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여성가족부. (2020. 5. 11.).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89551> 에서 2021. 4. 24. 인출.

여성가족부. (2021a).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1b).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서울: 여성가족부.

#### 참고문헌

-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a).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 (2020b). 2020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Youth Protection Policy: Focusing on Policy Agenda “Community Youth Support Net Project”

**Kim, Jiy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Youth Protection Policy over the past year and the challenges in the future. The focus is especially on the “Youth Support Net Project”, a part of the “Equal Growth Opportunities for Youth” initiative.

The Equal Growth Opportunities for Youth Initiative is aimed at building up a safety net for youth including those deemed at risk. The initiative helped set up Youth Safety Net Teams, local-level entities that are task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set of services for youth. Also, efforts are under way as part of this initiative to construct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t-risk Youth” (2020–2022). Although the harmful environment surrounding youth is rapidly changing and the local community shoul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youth protection, Youth Support Net is however still being piloted in only 15 regions nationwid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concern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in youth intervention. What sets this policy apart from previous measures is that it focuses on a paradigm shift. However, bold innovation is required to completely change policy foundation, and whether it will succeed or fail depends on how much the government will invest in the policy.